

〈서 평〉

『해방 후 조선』(1949년)*

金 學 俊

(서울大 政治學科 副教授)

1. 이 책의 기본적 성격

이 책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다음 두 가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가 이 책의 발행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무성 보안간부 학교」라는 사실이며, 둘째가 이 책의 발행일이 1949년 1월 30일이라는 사실이다. 이 두 사실만으로도, 이 책은 북한 정권 수립 직후 북한의 권력 당국자들이 체제 유지의 일선에 서 있는 경찰 간부들에게 해방 3년의 남북한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가르치기 위해 만든 교재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기본 성격이 그렇기에, 이 책은 처음부터 북한에 대한 무비관적 찬양과 남한에 대한 무조건적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은 이 책의 그러한 정치적 당파성과 이념적 편견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할 까닭은 이 책이 해방 3년의 남북한을 북한 당국자들이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등사판으로 되어 있다. 제 1분책이 1백 48페이지이고, 제 2분책이 1백 34페이지이며, 제 3분책이 1백 68페이지이다.

3. 제 1분책의 내용

제 1분책은 3장으로 되었는데, 주로 해방 3년의 남한을 비방하기 위해 쓰

* 이 책을 구해주고 장기간 대출해 준 하버드대학교 燕京圖書館 韓國部 金聖河 부장님께 깊이 감사한다.

여겼다. 제 1 장이 「대일 전쟁에서의 소련의 결정적 역할과 조선의 해방」이다. 제 1 절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서의 조선」인데, 한민족의 피나는 항일 투쟁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박멸시키지 못한 사실을 결론으로 삼았다. 이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조선혁명운동사가 증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혈투도 일본 제국주의를 박멸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원인은, 첫째로 우리들의 통일적인 단결이 없었으며, 둘째로 혁명적 력량이 분산되어 있었으며, 셋째로 조선의 자주독립을 쟁취하는 로선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조선 인민의 총의와 리익을 대표하여 옹호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을 가질 수 있는 강대한 정치적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 조건이 혹독한 일본 군사 경찰력의 탄압과 아울러 자기 손으로 되는 조선 인민의 해방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p. 12).

제 2 절은 「소베트군대는 조선인민의 해방자이다」로서, 제 2 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연합국의 승리와 일제의 패망 및 한민족의 해방이 모두 소련의 공로에 의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침묵하고 있거나 「침략적 의도」아래 행동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소베트군대는 련합국간의 협정에 예견된 바 원측에 근거하여 북조선 지역에 진주하였다”라고만 썼다. (p. 19).

제 2 장은 「조선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주와 반동간의 투쟁」이다.

제 1 절은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다. 이 부분은 모스크바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의 ‘신탁통치’라는 표현을 전혀 쓰고 있지 않으며, ‘원조 협력(후견)’이란 표현만을 쓰고 있다.

제 2 절은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남북조선의 정치정세」이다. 1946년 1월 2일 북한의 정당·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으로써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이름이 보인다. (pp. 30~31). 남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승만과 김구 및 한민당을 가혹하게 비난하고 있다. (pp. 32~33).

제 3 절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조선문제 결정의 전말을 천명하는 마스통신(1946년 1월 26일)」이다.

제 4 절은 「4개국 공동후견제의 필요성은 어디 있는가」이다. 이 물음에 대한 결론적 대답으로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상에 언급한 [조선의] 모든 형편에 의하여, 만일 해방 후 조선의 운명을 쓰련의 관심이 없이 조선 인민 자체의 해결에 방임하여 두었다면 해방된 조선은 다시 어느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예속으로 들어 가며 극동 평화 유지의 전초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로 되고 말리라는 것은 오늘 남조선의 실정에 비추어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이 어느 다른 나라의 관심 「협력」에만 처하여 있었다면 오늘날 조선이 어떠한 형편에 있을 것이며 그 반면 조선의 운명을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쓰련만의 관심과 원조협력하에서만 있었다면 오늘날 조선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겠는가는 3척동자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후견 제안은 쓰련의 제안이요 이는 해방된 조선이 다시금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이요 삼상 결정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승만 김성수 및 그 도당들이 말하는 바와 같은 신탁은 아닌 것이다. 조선은 극동평화의 초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제국주의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영·미·중은 벌써 조선을 탐낸지 오랜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관계로 쓰련의 단독 후견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4개국 공동 후견제를 내용으로써 이들의 야욕을 감시하여 조선의 완전 자주 독립을 일차적으로 보장하자는 데 있었던 것이다.』(pp. 47~48).

제 5 절은 「제 1 차 쓰미 공동위원회의 경위」이며, 제 6 절은 「쓰미공동위원회의 결과와 공동위원회 재개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고, 제 7 절은 「제 2 차 쓰미공동위원회의 경위」이며, 제 8 절은 「제 2 차 쓰미공동위원회의 결렬과 반동파들의 반동적 역할」이다. 이어 제 9 절은 「조선문제에 대한 쓰련의 진정한 주장과 유엔의 비법적 결정」이며, 제 10 절(이 책에는 제 9 절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이 「유엔위원단을 배격하는 전 인민적 항쟁」이다.

제 3 장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 정세」이다. 제 1 절은 「일체의 기반으로부터의 해방 후 미국 군대의 진주까지(1945년 8월 15일~9월 8일까지의 남조선에서의 정치적 양양)」이다.

우선 건준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깊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준을 북한 당국자들이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정확히 보여 준다.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 본다.

『경성에서는 1945년 8월 17일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일체의 민주주의자

애국자를 망라하여 정권을 수립할 때까지의 과도적 준비기관으로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창황히 조직된 만큼 인민대중 가운데 확고한 뿌리를 박지 못하고 명사 중심의 막연한 조직체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오히려 인민대중에게 끌리어 나가는 형편이었다. 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 조직의 정비와 강화를 위하여 8월 2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1부 1국제를 채용하는 동시에 그 부서도 새로 선임하고 선언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민주와 독립의 기치 아래 자기 체제를 정비한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자못 활발하여졌으며 그 민주주의적 로선은 인민대중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게 되었다.』(pp. 89~90).

이처럼 건준이 발전되어 나가자 「천일 반동 세력」이 저항하고 나섰다. 이 책은 보았다. (pp. 90~91).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준은 지방으로 확대되어 나갔다고 주장한 이 책은 이 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각 지방에서는 중앙에 보조를 맞추어 자발적 민주력량을 집결하여 건준도 위원회 및 지부가 뒤이어 결성되었으니 8월 31일까지에 그것은 실로 1백 45개소에 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지방에서는 벌써 인민의 지방주권으로서 인민들이 창의를 의하여 각계 각층의 민주세력을 집결집중된 인민위원회들이 창설되었다. 인민은 건준보다 오히려 더 앞에서 전진하는 기세이었던 것이다.』(p. 92).

이 책은 이어 “이와 같이 결집되고 양양된 해방된 조선 인민의 총의는 인민주권이 하루 빨리 수립되기를 절박하게 갈망하고 기대하였다. 이에 의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은 창설되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한 다음, 문제의 「인공」을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pp. 92~93).

제 2절은 「남조선인민위원회의 해산」이다. 여기서 이 책은 해방 직후 귀국한 이승만과 김구를 모두 혹평했다. 그들은 “인민의 동정도 받지 못한 체 탐욕적인 정권 쟁탈만을 꿈꿀 뿐이었다”(p. 99)라고 쓰고 있다. 제 3절은 「남조선에서의 미국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정책」이다. 제 4절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비호하에 있는 국내 반동파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민주력량」이다. 여기서 다시 이승만과 김구를 매도하고 있다.

『반동진영에서는 이승만이 소위 “덜어놓고 뭉치자”고 외친 이래 여러 가지 모순과 내분을 계속하면서도 결국 미 군정의 비호하에 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동분자들을 모조리 규합하면서 반민족적 반

인민적 행동을 날이 갈수록 로골화하였다. 리승만은 “각당 각파를 총망라한다”하면서 사실은 한민당 중심으로 ‘대한독립촉성협의회’를 조직하려다 실패하고 그 반동적 본질을 폭로하였을 뿐이었다. 뒤이어 중경에 집거해 있던 소위 ‘망명정객’들이 귀국하였으나 민주진영으로 넘어 온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그들도 그 반동적 면모를 인민들 앞에 드러내고 인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뿐이었다.』(pp. 112~113).

제 5 절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주구이며 민족반역자 반동분자인 리승만 김성수 및 그 도당들은 조선 인민의 원수이다」이다. 여기서 이 책은 이승만과 김구 및 한민당을 매우 세차게 비난하고 있다. 김구와 그가 이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리승만으로는 대중을 기만하기에 부족을 느끼게 된 반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신비적 존재’를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개인의 자격으로 겨우 귀국한 김구 집단은 그가 自高하던 ‘혁명적 전통’을 (김구에게는 혁명적 전통이 없음) 헌신짝과 같이 내버리고 미 군정의 권력하에 한민당과 악수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매개로 인민의 지지를 강요하게 되었다. “내가 왔으니 정부도 온 것이지”하던 김구의 호언도 일장춘풍이었으며 “국내혁명세력인 우익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었다. 즉 리승만과 김구는 선후하여 그 ‘애국자’라는 가면을 벗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테러단장으로 출현하게 되었다.』(pp. 120~121).

제 6 절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반동정당(한국민주당 서북청년회를 선두로 하는 반동세력들)을 반대하는 민족전선」이며, 제 7 절은 「미 제국주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는 인민항쟁(10월 인민항쟁)」이다. 이어 제 8 절은 「남조선 소위 ‘국회’의 조작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이다.

4. 제 2분책의 내용

제 2 분책과 제 3 분책은 해방 3년의 북한을 일방적으로 찬양한 것이다. 우선 제 2 분책을 보면, 제 4 장이 「진정한 인민정권 기관인 인민위원회」로서 제 1 절이 「인민대중의 자치기관으로서의 지방인민위원회의 발생과 그의 활동」이다. 제 2 절이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조직과 그의 의의」이다. 여기에는 「임시인민위원회」가 설정한 11개 「긴급한 과업들」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1) 친일분자 及 반민주적 반동분자를 철저히 숙청하며 유력한 간부들 각 부문 지도사업에 등용하여 각 지방의 행정기구를 강화할 것.
- (2) 최단기간 내에 일본침략자 及 친일적 반동분자에게서 몰수한 토지와 삼림을 정리하며 조선인 지주의 토지와 삼림을 적당한 방법으로 국유화시키며 반분소작제를 철폐하며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여하는 것으로써 토지개혁의 준비기초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
- (3) 생산기업소를 인민생활 필수품에 수용되는 기업소로 변경하고 그 발전을 도모할 것.
- (4) 철도 통신 운수 등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
- (5) 은행 등 금융기관의 체계를 정돈하며 무역사업에 대한 정책을 정확히 수립할 것.
- (6) 중소기업의 개량과 발전을 도모하며 기업가와 상업가들의 창조성을 장려할 것.
- (7) 노동운동을 적극 방조하며 광산 기업소와 운수업기관에 공장위원회 즉 제작소위원회의 광범한 조직망을 설치할 것.
- (8) 민주주의적 개혁에 적응하도록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하며 초등·중등학교를 확장하며 교원양성을 준비하며 국정교과서를 편찬할 것.
- (9)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화사상을 청소하기 위하여 진실한 민주주의적 정신으로 인민을 교육하며 각계의 인민에게 문화계몽사업을 광범히 전개시킬 것.
- (10) 북조선에 있어서 중대한 식량문제의 적당한 대책을 긴급히 수립할 것.
- (11) 조선인민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고 공정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한 결정의 진의를 일반인민에게 정확하게 해석하여 줄 것. (pp. 14~15).

제 3 절은 「1946년 11·3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선거 실시와 그 의의」이며, 제 4 절은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대회」이다. 이어 제 5 절은 「북조선 인민회의의 조직 및 그 권한과 임무」인데, 대의원 총수 2백 37명 가운데 “로동당원 37.9% 민주당원 12.7% 청우당원 12.7% 무소속 36.7%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15%가 여성이다. 사회성분을 본다면, 노동자 22% 농민 26% 사무원 24% 상인 4% 기업가 3% 종교인 4% 인테리 15% 수공업자 2%로 된다”고 밝혔다. (pp. 22).

제 6 절은 「북조선 인민위원회의의 조직」이다. 「북조선 인민위원회의에 관한 규정」이 전제되어 있다. (pp. 26~29).

제 5 장은 「인민정권하의 북조선 민주개혁」이다. 제 1 절은 「북조선에 있어서 민주개혁의 필연성」이며, 제 2 절은 「북조선에서 민주주의 제 개혁과 민주주의 건설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다. 이어 제 3 절이 「토지개혁」인데, “토지개혁의 결과로 함께 105만 정보의 토지 즉 북조선 전체 경작면적의 절반이 무상으로 몰수되었다. 일본인 소유지와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가 완전히 몰수된 것이다”라고 전제한 다음, 그 내역을 자세히 밝혔다. (p. 39).

몰 수 토 지 종 별	면적(정보)	비 율
일본국가 및 일본인 소유지	100,500	9.5%
조선인민의 반역자의 소유지	21,683	2.5%
조선인 대지주와 토지전부를 소작주는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	650,000	62.0%
계속적으로 소작주는 지주의 소유지	263,000	25.0%
교회 및 승원의 소유지	14,855	1.4%

“이밖에도 일본인 및 조선인 지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재산들이 몰수되었다. 과수원……71,770정보, 산림……3,432,986정보, 관개시설 개소수……1,165개소, 물리면적……50,502정보, 소……4,658두, 말……116두(p. 39).” “몰수된 토지는 [……] 토지없는 농민과 토지 적은 농민의 영원한 소유로 무상으로 분여되었다. 북조선 전체 농가의 72%에 해당하는 724,522호의 전부가 토지 분여를 받았다. 토지는 다음과 같이 분여되었다. 빈농(17,137호……22,387정보), 토지 없는 소작인(442,975호……603,407정보), 토지 적은 소작인(260,501호……345,407정보), 타군에서 자령하려는 지주(3,911호……3,622정보).” (p. 40).

제 4 절은 「산업국유화법령」이며, 제 5 절은 「개인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 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법령의 실시」이고, 제 6 절이 「노동법령의 실시」이다. 제 7 절이 「남녀평등권 법령의 실시」이고, 제 8 절이 「경제적 제 개혁을 위한 인민경제의 발전계획과 그의 성과」이며, 제 9 절이 「화폐교환」이고, 제 10 절이 「북조선에서 진행된 사회경제적 제 개혁들의 성과」이다. 제 11 절은 「북조선 교육문화의 민주화」이며, 제 12 절은 「북조선 도·시·군·면·리 인민위원회 선거법령 실시」이고, 제 13 절은 「북조선 사법 검찰기관의 민주화」이며, 제 14 절은 「보건 부문에서의 민주개혁의 성과」이다. 마지막으로 제 15 절은 「조선인민군의 조직」

이다.

제 6 장은 「북조선 민주개혁의 역사적 의의」이다. 제 1 절은 「북조선 민주개혁의 성격」이고, 제 2 절은 「북조선 민주개혁의 역사적 의의」이며, 제 3 절은 「북조선 민주개혁 승리의 원인」이다.

제 7 장은 「북조선 제 민주정당과 사회단체」이다. 제 1 절은 「북조선로동당」이다. 북조선로동당의 창당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재건을 인정하고 있다.

『1945년 8월 20일 일제의 탄압하에서 지하에 또는 감옥에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서울에서 박헌영 선생을 위시로 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9월 11일 조선공산당이 재건되었다. 그러나 북조선에 쓰러진군대가 진주한 유리한 조건하에서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북조선에 조선공산당중앙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1945년 10월 2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중앙국을 성립하게 되었다. 조선신민당은 당 전신이 조선독립동맹으로서 1946년 1월 16일 조선신민당을 결성하였다. 량당이 합당하게 된 경위는 1946년 7월 22일 조선신민당과 북조선공산당 합동에 대하여 조선신민당 중앙상무위원회 대표 김두봉 선생으로부터 북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김일성 장군에게 서신을 보내었다. 7월 24일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과의 합동에 대하여 공산당으로부터 답신을 보내게 되어 7월 29일 량당중앙확대 집행위원회련석회의를 개최하고 북조선공산당 조선신민당 합동을 결정하였다. 8월 28일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북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다.』(p. 90).

양당의 합당 과정에 잡음이 있었음을 이 책은 시인하고 있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두 당의 합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공산당원 중에는 착오된 경향을 발견하게 되었다. “몇 가지 중요한 레를 들면 첫째로 그들의 독선적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신민당과 합치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그들한테 물어보기를 ‘언제 그렇게 백이숙제가 되었는데?’고. 이런 것은 첫째로 남을 깔보는 것이오 나만 잘났다는 것이요 혁명사업은 나만 하는 것이 좋다는 배타주의적 경향인 것입니다. 이는 로동당의 시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혁명사업이란 전체 혁명동지들이 합심하여 전 인민대중이 단결하여야만 승리한다는 간단한 도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착오입니다.” (김일성 장군). 이와 같은 종파주의적 경향은 더 발전한다면 당 사업을 파괴하는 경향인 것이

다. “또 한 가지 엄중한 경향은 로동당의 신민당화, 소자산계급화라고”(김일성 장군) 떠들어대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합동을 좋아하지 않는 좌경적 표현이지만 그보다도 그 경향이 내포하고 있는 우경적 독소에 대하여 특별한 경각성을 들릴 것”(김일성 장군)이 요구되었다. 이는 당의 정치상·조직상·규율상 존엄성을 해태시키고 당으로 하여금 한 개 근로대중의 구락부로 소자산계급식 友誼단체로 化하려는 경향들인 것이었다. […….]

이와 아울러 신민당 내 부분적 당원들은 합당에 있어서 주로 우경을 범한 자들이 많았다. 즉 “량당이 합동하는 것은 공산당이 과거에 있어서 과실을 범했기 때문에 또한 신민당 정책이 옳았기 때문에 합동하게 되는 것이다” 또는 “공산당에는 무식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신민당에는 유식한 사람이 많이 모이었던 때문에 배우려고 합동한 것이다” 등등 우경적 분자들이 근거도 없는 구실로써 합당을 반대하는 종파주의적 경향을 가진 분자들이 있었던 것이다.』(pp. 93~94).

“당은 1948년 3월 하순 제 2 차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3월 29일 당 규약을 수정하고 각 위원을 피선하고 1948년 9월 25일 제 3 차 중앙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상무위원회를 17명으로 확대하고 상무위원으로 김렬 박영선 양씨를 보선하고 현재 각 위원은 아래와 같다.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 원 장 : 김두봉

부위원장 : 김일성 허가이

위 원 : 주녕하 김 책 외 61명

상무위원 : 김두봉 김일성 주녕하 허가이 김 책 최창익 박일우
박정애 박창욱 진방수 정준택 기석복 정일룡 김 일
김재욱 김 열 박영선

정치위원 : 김두봉 김일성 주녕하 허가이 김 책 최창익 박일우.”
(p. 94).

이어 「북조선로동당 강령」과 「북조선 로동당 규약」이 각각 전문 게재되어 있다.

제 2 절은 「천도교청우당」이며, 제 3 절이 「북조선민주당」이다. 이 책은 민족주의자 조만식 선생을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역으로 조만식의 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초대 당수는 조만식이었는데 그는 반동적 자기 친우들을 믿고 당의 주

요 간부로 등용하고 남조선 반동파들과 결탁하여 최초의 3·7제를 반대하고 곡물성출을 반대하여 농민과 인민위원회를 리탈시키려고 하였으며 민주력량의 단결을 와해시키고 민주주의적 완전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방해하기 위한 반동적 책동을 하였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발표되자 남조선 미군정과 결탁한 반동파들의 조종하에서 반동적 책동을 로골화하게 되었다. 그는 1946년 1월 5일 평남도 확대위원회 때에 “모스크바 3상 결정 내용을 충실히 모르겠다. 침묵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또한 전체 당원을 침묵케 하겠다고 하면서 오산학생사건 함흥학생사건 등을 조직하여 반동적 책동을 하게 되었다. 용강군 당부에서는 이 중앙의 결정을 반대하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중앙위원회 숙청을 요구하였다. 同日 부당수 최용건 장군은 당내 반동분자 소탕과 당의 사업총결을 선언했고, 1946년 2월 24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1947년 4월 23일 3백 34명의 대표 참가하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의 사업총결과 당면과업을 제시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경리를 확립시키고 당을 사상적으로 발전시키었다. 오늘 북조선민주당은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 한 정당이다.』(pp. 107~108).

제 4 절은 「북조선 사회단체」이다. ① 북조선직업총동맹 ② 북조선농민동맹 ③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④ 북조선민주청년동맹 ⑤ 북조선기독교련맹 ⑥ 북조선불교총련맹 ⑦ 북조선문학예술총련맹 ⑧ 조소문화협회 ⑨ 북조선소비조합 ⑩ 북조선애국투사후원회 ⑪ 북조선적십자사 ⑫ 북조선인민항공협회 ⑬ 북조선공업기술총련맹 ⑭ 북조선보건련맹 ⑮ 북조선농림수산기술총련맹 등등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

제 5 절은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이며, 제 6 절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는 1949년 6월 25일 평양 모란봉극장 회의실에서 열렸다. 6월 28일 회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강령」과 본대회의 선언서를 채택했다.

◎ 강 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며 국가의 민주 발전을 보장하며 봉건적 잔재를 숙청하여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①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즉시 철거케 하며 소위 「유엔위원단」을 물러가게 하고 조국의 완전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

② 통일을 반대하는 조국의 반역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을 급속히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인민들의 총력량을 동원한다.

③ 우리 조국의 북반부에서 이미 실시된 민주개혁들을 일층 확고 발전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④ 1948년 8월 25일 총선거의 결과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지지하며 조선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화국 정부의 활동을 협조한다.

⑤ 전 조선적으로 광범한 민주개혁을 실시하며 전체 조선 인민에게 공민의 동등권과 언론·출판·집회·시위·결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⑥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과 조선 반동분자들에 의하여 탄압 당한 인민들의 자치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며 그 합법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⑦ 일본국가 일본인 개인 법인 및 조선 인민의 반역자들에게 소유되었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는 원칙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⑧ 일본국가 일본인 개인 법인 또는 조선인 반역자들에게 소유되었던 산업 및 기타 기업소들의 국유화를 남조선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⑨ 남조선에서 민주운동에 대한 탄압과 테러를 반대하여 남조선 감옥들에 투옥된 애국자들의 석방을 위하여 투쟁한다.

⑩ 소련과 민주주의중국과 인민민주주의 제 국가들과 및 기타 자유에 호국가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⑪ 일본을 제국주의적 일본으로 부활시키려는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⑫ 침략적 동맹을 조직하여 새 전쟁도발 목적을 가진 제국주의 국가들의 정책을 반대하며 평화와 국제적 협동의 강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⑬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조선 인민들 속에서 문맹을 퇴치하며 지식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사상 잔재와 기타 온갖 반민주주의적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pp. 126~128).

◎ 선언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천할 것을 남북조선의 전체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전체 조선 인민에게 호소하며 下記の 평화적 통일 방책을 제의한다.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을 조선 인민의 자기의 수중에 틀어 쥐고 우리 인민 자체로 반드시 실천하자.

②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방해를 주는 미군이 우리 조선에서 즉시 철퇴할 것을 요구한다.

③ 우리는 비법적 기관인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 강토로부터 즉시 물러갈 것을 요구한다.

④ 우리는 남북조선을 통하여 통일적 립법기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선거를 실시하자.

⑥ 조국의 평화적 통일 계획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에서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하자.

⑦ 립법기관 선거는 1949년 9월에 실시하며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비밀 투표의 원칙에서 실시하자. 일본 통치시대에 일제와 열성적으로 협력한 자들은 선거권을 박탈한다.

⑧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반드시 실시하자.

가.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그의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할 것.

나. 전체 민주주의 제 정당·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며 그들에게 자유적 활동권을 보장할 것.

다.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 출판기관들의 폐간에 대한 지령을 취소하고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에게 자기의 출판기관을 가질 권리를 보장할 것.

라. 언론 출판 집회 군중대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

마. 전체 정치범들은 즉시 석방할 것.

⑨ 선거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남북조선에 현존하여 있는 정부와 그의 기관 중에 선거 준비와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지시들을 줄 것.

나. 자기의 결정과 지시 실행을 검열할 것.

다. 선거지도위원회가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에서 외국 군대의 철거를 감시할 것.

⑩ 총선거지도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남북 조선에 현존하여 있는 경찰 보안 기관들을 선거지도위원회의 직접 관할하에로 넘어 온다. 선거지도위원회는 경찰대로부터 친일파 일본경찰과 헌병대에 복무하던 자들을 제대시키며 제주도 인민항쟁과 남조선 유격운동 탄압에 참가한 경찰대들을 해산시킨다.

⑪ 총선거의 결과에 수립된 최고립법기관은 조선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며 그 헌법에 기초하여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는 남북 조선에 지금 현존하여 있는 정부들로부터 정권을 접수하며 그 정부들은 해산된다.

⑫ 남북 조선에 현존하여 있는 군대들은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조선공화국 정부가 연합시킨다. 제주도과 기타 지대들에서 인민항쟁과 빨찌산 운동 탄압에 참가하였던 남조선 「국방군」 부대들을 해산시킨다. 인민항쟁과 빨찌산 운동 진압에 참여하였던 자들에게는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 탄압을 주동한 자들과 조직한 자들은 처벌을 당한다.』(pp. 128~130).

5. 제3 분책의 내용

제 3 분책은 제 8 장 「통일적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으로 시작된다. 제 1 절은 「조선으로부터의 쏘미 량군 동시철폐에 관한 쏘베트 정부 성명 발표 후 국내의 정치정세」이며, 제 2 절은 「유엔위원단 도착 후의 정치정세」이고, 제 3 절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의 전 인민적 토의와 전 인민들의 적극 지지 찬동」이며, 제 4 절은 「1948년 4월 20일 평양시에서 개최된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의 토의된 문제들과 결정」이다.

평양의 남북 연석회의에서 박헌영이 연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박헌영의 각종 연설 내용들이 오늘날 거의 안 알려져 있음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연구 자료로 여기에 옮기기로 한다.

『만일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하였다면 조선은 완전 독립을 달성하여 평화적으로 벌써 자기 국가를 건설하였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조선 인민이 미군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미군은 조만간 남조선으로부터 반드시 철폐하여야 할 것입니다. 량군 철폐 후 조선 인민은 전반적 평등적 직접적 비밀 투표 방법의 선거에 의하여 통일 조선의 최고 립법기관을 선거하여야 합니다. 이 립법기관은 조선 민족정부를 수립할 것입니다. 조국의 리익은 금일 모든 민주 애국세력과 전 인민이 친목하게 단결하여 일치 행동할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통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독 선거를 파탄시킴으로써 조국을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남북이 통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의 독립을 완수하고 우리 인민이 세계 자유 인민들과 동등한 인민이 되기 위하여 통일해야 합니다. 조선의 모든 애국 세력의 전체 통일이 이 때까지 없는 것을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자기 식민지화 정책에 이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 회의는 이 결점을 고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매진합니다.』(pp. 14~15).

남북 연석회의를 설명하면서, 이 책은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해 남한에서 참가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제 5 절은 「남조선 단독선거 실시」로서, 5·10총선거를 맹렬히 비난했다. 제 6 절은 「소위 남조선 반동국회의 조작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5·10 단선 반대투쟁)」이며, 제 7 절은 「조선의 진정한 인민적 최고 주권기관 창설을 위한 투쟁」이다.

제 9 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다. 제 1 절은 「우리 조국에 조성된 어떠한 정치정세가 조선 최고인민회의의 선거를 실시하게 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 중앙정부를 수립하게 하였는가?」이고, 제 2 절은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선거 총화」이다. 1948년 8월 25일에 실시된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는 총수 4,526,065명의 선거자가 등록되었고, 등록된 선거자 중 4,524,932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투표율 99.97%). 2백 12개 선거구에는 2백 27명의 후보자들이 등록되었는데, 그 가운데 2백 12명이 당선됐다(pp. 46~47). 이 책은 남한의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통계를 제시했다. “남조선 인민 대표자대회 대표 선거에는 남조선 전 유권자 8,681,746명 중 6,732,407명 즉 전 유권자의 77.52%가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에는 1,080명의 대표가 피선되었는데 대회에 도착된 것은 1,062명이었다. [……] 8월 21일부터 26일 간에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 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는 비밀투표로서 남조선 인구 수에 적합하게 5만명 인구에 대하여 1인 대의원으로 3백 60명의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선거하였다. [……]계 5백 72명이다. 성별은 남자 503명 여자 69명이다.” (pp. 47~50).

제 3 절은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제 1 차 회의와 그 결정」이며, 제 4 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이다.

제 10 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다. 제 1 절은 「기본원칙」이고, 제 2 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이며, 제 3 절은 「국가제도」이며, 제 4 절이 「결론」이다. 제 11 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의 2개년 계획」으로, 제 1 절은 「일제하의 조선경제 상태」이며, 제 2 절은 「북조선에서의 산업 및 운수복구사업」이고, 제 3 절은 「북조선의 기본적 경제 과업」이며, 제 4 절은 「1947년도 인민경제 계획, 1948년도 인민경제 계획, 1949~50년 2개년 인민경제 계획과 그의 전망」이다. 제 5 절

은 「자본주의 경제의 계획적 발전의 불가능성」이다.

6.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폈듯이, 이 책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은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신의 체제가 정통성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는 점을 강변하기 위해 쓰여진 책으로, 이미 강조했듯이, 정치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반박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해방 3년의 정치사 그리고 북한 정권의 성립 과정을 깊이 연구하려는 전문가에게는 한 차례 검토되어야 할 자료로 쓰여 질 수 있다. 이 당시를 설명하는 오늘날의 북한 공식 간행물에는 없는 자료와 통계가 여기에는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